1년의 시간 '특별한 전북의 시대' 열리는 중

"지난 1년 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바꿔 달라는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전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누비며 도전, 혁신, 성공을 실천해 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8기 도정을 이끌어 온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 지사로부터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2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Q. 취임 1년에 대한 감회가 어떠신지?

- 도민들께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저를 뽑아 주셨다. 선택의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바로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지난 1년, 그 절박한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쉽지는 않았다. 전북의 여건과 기반이 생각보다 척박했다. 황무지를 마주한 농부의 심정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기회를 찾고, 넓혀가는 것이 저를 선택하신 도민의 믿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다.

1년의 시간, 전북이 바뀌고 있다. 기업유치에 훈풍이 불고, 전북특별자치도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열게 됐다. 이차전지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엔진도 발굴했다.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도민께 드리고 있다.

Q. 주요 성과를 요약해달라.

-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약속의 실현을 넘어 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취임 1년차에 ㈜두산, GEM코리아, LG화학 등과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60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7조1,000억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환경단속사전예고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정책 혁신과, 이차전지·수소·농생명식품산업 등 산업 혁신을 통해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제도화된 협치로 전북발전을 이끌었다. 전북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역사문화권정비법 등 4대 현안 법안을 협치로 통과시켰다.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했고 지역대학과 함께 RIS, RISE 사업 지정에 성공했다. 공유대학을 추진하고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학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와 민정 그리고 농민이 함께하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지정됐고, 신(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다.

국가사업에서 다양한 성공스토리를 창출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건립 확정,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주요 공모사업에서 전북이 타 지역을 제쳤다. 국가예산도 사상 최초로 9조원을 돌파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도 통과시켰다.

아쉬운점을 꼽자면, 도정 발전을 뒷받침할 금융도시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숙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조속한 이행을 적극 촉구하고 입법 과제들은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서 풀어가겠다.

Q. 민선8기 2년차 운영은 어떻게 꾸려가나?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년 남겨뒀다. 특례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게 최대 목표다. 이와 함께 대광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입법 문제도 연내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여부에 따라 전북의 청사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7월 20일경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잼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4만 3천여 명이 전북에서 최소 열흘 이상 머물다 간다. 이들이 새만금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오랫동안 전북의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최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선사해서 전북의 외교적 자산, 문화관광 분야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도민들이 도정에 바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써달라는 것이다. 기업유치에 더 매진하겠다. 이왕이면 전북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 예를 들어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와 농생명식품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 기회발전특구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가동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도민들이 전북경제의 변화를 체감하려면 실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삼성과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속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 창업기업도 적극 키우겠다. 2,000억원대 투자 펀드를 1조 원까지 늘리겠다.

Q.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가 핵심 공약이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 현재는 그 이상을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취임 이후 60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7조1,000억원을 이뤄냈다. 채용규모도 8,042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대기업(주) 두산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SK온(주)와 LG화학 합작사가 각각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여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세라면 임기 내 5개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열심히 뛰겠다.

Q.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최대 이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무엇이고,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작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의 15개 분야 기술이 경제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이들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특화단지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 구축,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인허가 신속 처리, 예타 특례 제공, 기술·인력·금융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우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후발주자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들어설 기회의 땅, 새만금의 여건 덕분이다.

이차전지 생산기업들은 평균 10만 평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한다. 새만금은 10만 평의 대규모 단일부지 또는 그 이상의 부지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초 3년은 100%, 추가 2년은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실현이 가능한 산단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을 고민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새만금의 매력은 최근 기업들의 투자 행진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 23곳이 전북과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90% 이상인 6조4,000억원의 투자가 새만금에 집중돼 있다.

> 대기업 유치·대형 국가사업 선정 등 전북 성공스토리 창출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희망 실현 플랫폼… 정부안 마련 총력
> 농생명수도 육성 화룡점정은 새만금… 기반시설 완료 집중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이러한 새만금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Q.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도지사인 제가 직접 공모 PT에 나섰다. 이차전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에 나선다는 것이 사실 부담이 컸다. 그러나 전북의 절박함을 보여주려면 제가 나서는 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발표 준비를 위해서 20회 이상 리허설을 반복했고, 주말을 반납하고 공부도 했다.

행정적인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산업을 육성할 전담팀도 꾸리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5대 상용화 핵심센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도 15억원을 확보했다. 교육협치도 이뤄지고 있다. 전북대 등 6개 대학, 연구기관과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 센터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도민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의지를 결집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도내 대학생들도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도민들의 열망과 바람을 보여주었다. 이차전지 산업단지 지정을 향한 도민들의 의지와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Q. 전북특자도가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한다. 도민들은 특자도가 무엇인지, 또, 특자도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을 마음껏 시험하고 육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특례 반영과 통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집만 지은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구체적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개별 특례사업을 655건 발굴했다. 조정을 거쳐 232개 조문으로 압축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상태다.

최종 정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생명과 수소, 배터리, 국제학교, 대학정원과 비자발급 권한 이양 등 핵심특례가 원활히 반영되도록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 준비에 노력하겠다.

Q. 금융중심지 지정이 답보상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 모두가 약속한 공약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서 안타깝다.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명의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소재지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선상에 오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북금융도시 추진위원회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금융도시 기반도 착실히 마련하겠다. 이미 조성된 금융인프라와 디지털 금융 기반,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확대, 강화하겠다. 전북국제금융센터를 2026년까지 건립하겠다. 금융혁신 공유오피스도 올해 안에 조성하겠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하겠다.

Q.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 이 문제야말로 협치의 힘이 필요하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립은 법안 제정이 선결 과제다. 3월 법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불발돼 심사가 연기된 상태다.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

최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필수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환하여 추진하는 만큼 가장 빠르게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권과 의료계를 설득하겠다.

Q.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과제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자적 광역권의 시대를 열게 됐다. 광역권 시대에 적합한 교통체계를 갖추려면 대광법 통과가 필요하다.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전주권 신설 필요성이 인정됐다. 광역교통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대도시권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연내 법안 개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기재부 등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 프로세스의 핵심 조건은 양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주민 의사를 배제한 통합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

함께하는 혜택과 편의가 훨씬 클 때 통합의 물꼬가 자연스레 열릴 것이다. 상생협력사업의 취지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활권이 유사한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통과 문화, 복지, 교육 등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Q.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는?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시도와는 관계가 없다. 행정구역 결정문제와도 별개의 사안이다.

현 정부의 지역공약 중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것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현재의 자치단체는 그대로 둔 상태로 새만금 지역을 공동으로 관할하는 '가상의 통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단체장도 3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순환해서 맡고, 의회도 각 의회에서 5명 정도의 의원이 파견되는 형식이다. 이 가상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치사무 공백을 보완하고 3개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의미다.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

Q.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방향은?

- 수도라면 기반과 사람이 몰려야 한다. 이미 전북의 농생명 기반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사람이 모여야 한다. 청년농 창업 1번지를 조성하겠다. 2026년까지 청년 창업농 3천 명을 육성하고 청년창업 스마트팜 3배 확대를 이루겠다.

수요창출에도 나서겠다. 1년차에 일본과 베트남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 5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나가겠다. 국내에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해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 농축산물 제조와 가공,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농촌 융복합산업도 육성하겠다.

농생명혁신클러스터는 고도화하겠다. 종자산업은 김제공항개발부지를 혁신클러스터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미생물산업과 동물용 의약품 산업도 인프라와 예산확보에 나서겠다.

농생명산업수도 육성에 화룡점정은 새만금이다. 새만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 농생명용지다. 26년부터는 영농활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 완료에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새만금 글로벌푸드 허브 조성 용역을 실시해서 생산, 가공, 물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Q. 임기 1/4. 민선 8기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향후 계획은?

-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도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겠다. 전북이 겪어 온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극복해 나가겠다.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새로운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신산업을 시험하고 육성해보는 테스트베드로 키워 가겠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저는 '함께'의 힘을 믿는다. 전북은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전북발전의 염원은 이뤄질 것이다. 앞장서서 뛰겠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재훈 기자